

사드 배치 ICT 분야 영향 점검

박 은 지*

1. 개요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기습적 사드배치 공식 선언 이후, 중국 정부는 불과 31분만에 “강력한 불만과 견고한 반대”를 공식 성명 발표하였다. 이후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공식 항의(2016/7/24), 중국광전총국 한국 콘텐츠 규제 강화(8/1),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8/3), 방한중국인 관광객 20% 감축 지시(10/25), 민영 항공국 전세기 운항 불허(2017/1/3), 중국 내 일부 롯데마트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정지 및 불매운동 확산(2017/3) 등 제재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¹⁾ 아직 정보통신·방송 분야에 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 외 눈에 띄는 제재는 발견되지 않으나, 對 중국 교역에 있어 정보통신·방송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통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72, ejpark@kisdi.re.kr

1) 변경록(2017. 2. 23)

2. 본 론

(1) 정보통신·방송 분야 한중 교역 및 투자 현황

1) 정보통신 분야 수출입 및 투자 규모

〈표 1〉 주요국별 ICT 수출액/비중 비교

(단위: 백만불, %)

국가	2015		2016		2017. 1~2월 누적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중국	93,985	54.4	85,450	52.6	14,980	53.7
미국	16,465	9.5	17,503	10.8	2,330	8.4
베트남	12,022	7.0	16,099	9.9	2,904	10.4
EU	10,145	5.9	9,022	5.6	1,813	6.5
일본	5,150	3.0	4,193	2.6	663	2.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7. 3), 2017년 2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표 2〉 한국-중국 정보통신 분야 투자 규모

신고금액(백만\$)		국적비중(%) (해당 분야 투자 총액 대비)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14,943,431	1,280,236	44.1%	9.9%

자료: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해외투자현황”(산업분류: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
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통신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해외투자 금
액 합산)

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2011~2016년 누적 금액, 산업분류: KSIC 중 전기전자 제
조업, 통신서비스, IT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액 합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2016년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그중 한국의 對 중국(홍콩 포함) ICT 수출액은 854억 달러로 전체 ICT 수출의

52.6%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ICT 수출의 중요도와 한국의 높은 對 중국 ICT 수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결국 對 중국 ICT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ICT 상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보통신 분야 투자 규모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對 중국 정보통신 분야 해외투자 비중은 44.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 ICT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한국 내 외국인투자 규모는 한국의 중국 내 투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정보통신 분야 외국인투자의 9.9%가 중국 외국인투자이다. 정보통신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중국 내 투자를 감안한다면, 만약 중국 내 진출해있는 한국계 정보통신 제조업계에 중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방송 수출입 및 투자 규모

〈표 3〉 한국의 對 중국(홍콩포함)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2011~2015년)

구분	수출입금액(천\$)		국적비중(%) (수출입 금액 기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5년	99,400.9	2,413.0	46.0%	1.7%
2014년	109,628.9	1,381.3	42.8%	2.3%
2013년	35,025.0	1,344.0	14.6%	1.2%
2012년	13,162.0	987.8	7.3%	0.8%
2011년	21,268.8	1,052.4	12.6%	0.8%

자료: KISDI(2012~2016),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저자 재정리

비고: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

〈표 4〉 한국-중국 방송분야 상호 투자 규모

신고금액(천\$)		국적비중(%) (방송 투자 총액 대비)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해외투자(outward)	외국인투자(inward)
51,959	357,050	3.3	54%

자료: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해외투자현황”(산업분류: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2011~2016. 2분기 누적 금액, 산업분류: KSIC 문화방송업)

중국(홍콩 포함)은 2014년, 2015년 한국 방송프로그램 1위 수출 국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7%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수출비중이 14.6%에서 2014년 42.8%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연간 성장률이 무려 21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 한국 콘텐츠 급속 성장 요인으로 2010년 이후 중국 내 신규 방송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상속자들〉, 〈별에서온그대〉 〈런닝맨〉 등 한국 방송콘텐츠가 신규 온라인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전반의 인기가 재점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

한국의 대 중국 방송분야 해외투자의 경우 한국의 방송분야 전체 누적 해외투자액의 불과 3.3%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 한국 문화·방송업 외국인투자의 경우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의 전체 문화·방송업 외국인투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중국 자본이 국내 방송시장에 투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방송프로그램 수출 관련 공식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2014년 이후 중국 내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급속 확대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며, 한국 방송 시장 내 중국 자본의 투자 역시 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로 인한 방송 시장 ‘한한령’ 조치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윤재식(2015)

(2) 정보통신·방송 분야 영향 점검 및 통상 대응 가능성 점검

1) 방송콘텐츠 제재

'16년 8월 1일, 광전총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출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중파, 홈쇼핑, 인터넷미디어를 통한 한국 콘텐츠 노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한한령'을 구두지시했다고 전해진다.³⁾ 사드배치 공식 선언 초기 유은혜 국회의원실에서 실시한 31개 문화콘텐츠 업체 대상 <사드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사드배치 결정 이후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예로 한중 동시 방영 예정 사전제작 드라마 중국 내 편성 심의 보류, 한중합작 프로그램제작 및 한중합자투자 취소, 한국 연예인 캐스팅 작품·광고·행사 취소, MD 상품 공급 계약 보류, 출연료 수령 지연, 드라마 프로모션 취소, 중국 내 법인 등록 불발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⁴⁾

중국의 방송시장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기존 방송 플랫폼에 대한 높은 규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도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9월 2일에 발표한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데 관한 통지」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해외 콘텐츠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신문출판광전부서에서 발급한 《영화상영 허가증》 또는 《드라마 배급 허가증》 등 승인 문서를 취득해야 하며, 《영화 상영 허가증》 또는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사이트에서 한 해 동안 수입하여 방송하는 해외 영화·드라마의 전체 수량은 해당 사이트가 전 년도에 구입하여 방송한 중국산 영화·드라마 전체 수량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⁵⁾ 이처럼 중국에서는 온라인 방송플랫폼에서도 방송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하는 구조로 인터넷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오던 한국방송프로그램의 중국 내 허가증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변경록(2017. 2. 23)

4) 유은혜 의원 보도자료(2016. 9. 26)

5) 강하연·박은지(2016)

이러한 문화콘텐츠 제재 건에 대해 국제무역협정 차원에서 문제 제기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방송콘텐츠 관련 제재의 경우, WTO나 FTA 위반으로 문제 제기 불가하다. 방송서비스 산업은 중국이 WTO나 한-중국 FTA 차원에서 개방 약속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다.⁶⁾ 때문에 중국 내 매체에서 한국 방송콘텐츠에 가해지는 중국의 ‘한한령’ 제재를 WTO나 FTA 협정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무역 제재가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나름 국제통상법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ICT상품 제재 가능성

지금까지의 중국의 제재는 문화콘텐츠, 관광, 유통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ICT 상품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對 중국(홍콩포함) 2017년 2월 ICT 수출은 74.3억불로 전년 동월 대비 34.1% 상승한 수치이며, 메모리MCP, D램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실적 호조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⁷⁾

〈표 5〉 중국(홍콩 포함) ICT 수출 추이

(단위: 억 불,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6. 2	3	4	5	6	7	8	9	10	11	12	'17. 1	2
금액	55.4	70.1	63.0	67.8	71.4	67.4	75.4	78.0	77.6	80.4	84.0	75.5	74.3
(증감률)	(△15.6)	(△9.2)	(△19.0)	(△12.4)	(△6.7)	(△9.5)	(△3.7)	(△11.1)	(△12.5)	(△3.7)	(11.7)	(17.9)	(34.1)
중국	41.3	53.0	46.0	48.0	49.8	48.6	53.9	57.2	57.0	57.2	58.4	53.9	52.3
	(△21.7)	(△12.1)	(△24.2)	(△20.1)	(△14.9)	(△15.6)	(△11.0)	(△16.5)	(△18.5)	(△9.0)	(10.5)	(11.0)	(26.4)
홍콩	14.1	17.2	16.9	19.8	21.5	18.8	21.5	20.9	20.6	23.2	25.6	21.6	22.0
	(9.3)	(1.0)	(△0.1)	(14.3)	(20.0)	(11.1)	(21.4)	(7.8)	(9.8)	(12.3)	(14.6)	(39.3)	(56.6)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6) 우리나라 역시 WTO나 한-중국 FTA 차원에서 방송서비스 시장을 전면 미개방하고 있다.

7) 미래창조과학부(2017. 3. 15)

반한 감정 고조로 한국산 IT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확산 위험도 존재하나, 다만 한국의 對 중국 ICT수출 대부분이 중간재 수출이며, 독일, 일본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중국 산업 내 수요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ICT 상품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무역 구조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ICT 핵심 부품 수입을 줄이는 것은 중국 산업에도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⁸⁾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높은 ICT 산업 의존도를 감안할 때 ICT 분야로까지 중국의 보복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ICT 상품, 제조업에까지 무역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등 기술무역장벽(TBT) 위주의 비관세장벽의 형태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분쟁 시 기술무역장벽의 경우 기술규정, 표준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이들이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했는지가 TBT협정 위반의 판단기준이 된다. 중국의 무역 제재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라는 일차원적 이유로 차별적 무역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가안보, 인간 보건과 안전 등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명분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비공식 경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WTO 분쟁 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측된다.

3) 사이트 차단 가능성

중국은 지난 2014년 라인, 카카오톡 등 한국산 모바일메세징서비스에 대해 안보 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가 존재한다. 자국 내 테러조직들이 동영상 웹사이트,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메신저로 음모나 선동을 일삼고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을 차단했다.⁹⁾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8) 한국경제(2017. 3. 15)

9) 아시아경제(2015. 7. 10), 카카오톡·라인 중국 차단 1년... '막힌 중국' 뚫기 작전

두드러진 한국 인터넷서비스 차단 형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경험 상 관련 사이트 차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 차원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차단 인터넷서비스가 WTO 서비스 분류 상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고, 중국은 대부분의 WTO 회원국과는 다르게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완전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업체를 중국 내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국경간 공급으로 제공하는 경우(mode1 국경간 공급), 중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mode3 상업적 주재) 모두 중외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부가통신사업이 허가되며, 외국인 지분은 50%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 사업자가 50% 중외합자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만 공식적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외합자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 부가통신서비스 허가를 부여받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서비스를 차단당한 사업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서비스를 중국 내 제공하고 있는지 먼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구글과 야후 역시 중국 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업자로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합작 파트너사와의 트러블 등으로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경영권 포기 등 문제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CT 기업조차 통상적으로 중국 측에 쉽게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WTO 제소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 중국 시장의 힘이 상당함을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3. 결 론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사드 배치 영향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결과, 방송 분야의 경우 한국 콘텐츠 전반에 대한 ‘한한령’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중국이 방송서비스를 WTO나 한-중국 FTA에서 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차원 문제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아직 눈에 띄는 보복 조치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정보통신 무역에 있어 높은 중국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사드 배치 보복 영향 확대를 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미국 역시 다양한 무역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對 미 무역 역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과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대만과의 하나의 중국 관련 마찰 등을 ‘안보정책 핵심이익침해’로 정식 규정하고, 전방위적 무역제재를 취하였다.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중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일본 수출품 통관 강화, 반일운동을 전개했으며, 대만을 대상으로 중국관광객 제한, 대만정부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노력했다. 한국의 사드배치의 경우 아직까지 안보상 핵심이익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사드배치라는 안보 상 결정이 우리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두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하연·박은지 (2016), “RCEP, TISA, 한중일, 한중미 FTA 등 방송통신 시장 규제 현황 분석 및 통상협상 방안 마련”, KCC-2016-04.

미래창조과학부 (2017. 3. 15), “2017년 2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변경록 (2017. 2. 23), “사드 배치, 국내증시 영향점검”, 삼성증권 Global Market Strategy.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유은혜 의원 보도자료 (2016. 9. 26), “사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피해 속출, 정부는 무대책!”.

윤재식 (2015), “중국의 한국 콘텐츠 수용 현황과 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6),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경제 (2017. 3. 15), “대중(對中) ICT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는 75.9%
급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